

# 당정청,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책 민간 영역으로 확장

##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車 부품 활성화 등 6개 과제 점검  
을 7개 대표공기업 모범모델 도입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11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공공기관 거래관행 손 보기에 나섰다. 또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비공개)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과제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등 6가지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공공분야에서 민간영역으로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체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고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검토에 나선다. 금

용위원회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설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봉제산업 납품단가 문제는 임가공 협력업체와 의류 대기업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대졸모집인과 대리운전 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직종 적용대상에 추가해 개선한

다.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올해 안에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을지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기구로 재편하고 5개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분야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다.

정부의 경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경욱(국토부)·김학도(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실·국장이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日 수출규제 대응 추정 최대 3000억 반영

더불어민주당, R&D·상용화 등  
대일 의존 상위 50개 핵심 품목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긴급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이 말한 긴급 추진 사업은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먼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한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협력)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선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대책을 발표하며 “추경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을 생산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기업은 물론 야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조 의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

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한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여당·정부)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자금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 ‘해외 기술규제’ 건수 사상최대 기록

산업부, 2018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지나해 각 나라가 수입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만든 해외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력 기술규제 장벽을 1년 사이 28%나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공개한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6개국에서 3065건의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이뤄졌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상대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해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반도체 소재 3개 부품에 대한 한

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해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46건의 무역기술장벽을 통보했다. 한국(64건), 중국(65건)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전년의 36건보다는 27.8% 늘었다. 일본의 무역기술장벽 통보 증가 건수는 2016~2017년 4건에서 2017~2018년 10건으로 2.5배 뛰었다.

보고서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발행건수가 미국은 감소 추세인 반면, 일본과 중국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앞서 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한 규제 대응 사유, 대응 과정, 해소 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 전략과 성공 사례는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석대성 기자

## 法 “비자거부 위법”... 유승준, 韓 땅 밟는다

2002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

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유일한 이유로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총영사관이 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 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손현경 기자 son89@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있기 전 입국 금지 결정은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내부의 지시에 불과한 만큼 이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손현경 기자 son89@

고용부, 2019 고용형태 공시 결과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1000인 이상 기업 815곳의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9%로, 공시 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3454곳의 평균(18.1%)보다 2.8%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비율(16.9%)은 300인 이상 기업 평균(18.2%)보다 1.3%포인트 낮았고, 단시

간 노동자 비율(2.5%)은 평균(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간접고용,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 비율은 1000인 이상 기업이 40.3%로, 300인 이상 기업 평균(38.5%)보다 1.8%포인트 높았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소속(직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79.1%로, 평균(81.9%)보다 2.8%포인트 낮았다.

고용형태공시는 300인 이상 기업이 노동자의 고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고용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부터는 10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별 고용형태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주요 업무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석대성 기자